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 금리 (연율)	↓ 환율 (원/달러)
2528.92 (-3.86)	737.90 (-6.06)	2.541 (-0.025)	1460.70 (-2.70)

metro® 경제

주택수요 회복에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
02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개장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관련기사 13면> /손진영기자 son@

내수침체 영향 본격화 되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영업실적 부진에 신용등급 하락
단기자금 부담 해소 선제적 대응
MBK "경영정상화 협력 다할 것"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힌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뉴스1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내수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한신평 신용등급별 정의에 따르면, A3은 '적기상환의 가능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

다. +, -는 동일 등급 기준 내 우열을 나타낸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배경으로 ▲영업실적 부진 장기화 ▲과중한 재무 부담 지속 ▲중·단기 내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기업평가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과 소비 트렌드 변화,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홈플러스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품군 강화 및 점포 리뉴얼을 통해 매출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고정비 부담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지난 2022년 6조 4807억원, 2023년 6조 6006억원, 2024년 6조 931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35억원, -2602억원, -1994억

원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에 2024년도 실적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은 462%로 전년 대비 1506%p 개선됐으며, 지난해 12개월 매출액 역시 7조 462억원으로 2.8% 성장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2024년 회계년도 실적이 그전보다 개선이 됐는데, 갑작스레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다"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운전 자금을 쌓아두고 쓰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규모를 줄이거나 기준을 변동하면 현금수지에도 변동이 올 수 있어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 불황 먹구름 짙어진다

통계청, 1월 산업 활동동향
산업생산 5년래 최대폭 줄어

국내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산업생산, 소매판매(소비), 투자 등의 3대 지표가 모두 후퇴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이래로 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첫 달의 전(준)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로 2.7% 줄어 들었다. 감소 폭이 지난 2020년 2월(-3.2%)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건설업과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일제히 감소했다.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줄었다. 기타운송장비(2.8%)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조립장비 등 기계장비(-7.7%)와 OLED 등 전자부품(-8.1%)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8.0%)과 달리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생산의 경우, 0.1% 늘어났으나 지난해 10월(+4.7%), 11월(+3.5%), 12월(+3.5%) 등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4%)와 수출(-10.3%)에서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월대비 6.2% 감소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도소매(-4.0%), 운수·창고(-3.8%) 등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0.8%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4.3% 줄며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긴 설 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대부분의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생산뿐만 아니라 1월 소비(소매판매)와 투자도 전달에 비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설 연휴가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는 0.6% 줄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에서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조선·에너지·관세·비관세 등 美 행정부와 5개 협의체 구성"

안덕근 산업장관, 訪美성과 발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곧 실무자를 추가 파견해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6일~28일 워싱턴D.C.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방미 최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협의체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조선·에너지·알래스카개발·관세·비관세 등 5개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조선협력 협의체와 관련 "이번에 가서 만든 실무협약체는 기본적으로 국장급으로 구축됐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 국방부,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될거라고 알려졌고, 미국은 백악관 내 조선관련 TF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에 있어서 러트

닉 상무부 장관이 협의체 끌고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상무부가 끌고 나갈 거 같다"며 "우리 카운터파트가 누구일지는 협의해가면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주라도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실무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미측도 우리 조선업계 발주가 몇년씩 돼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지만 조선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니 까저쪽에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조선 협력 협의체 외에도 알래스카 공동 개발, 에너지 협력, 관세·비관세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키로 했다.

안 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서 나오는 관세 조치는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발표 이후 협의해서 예외를 만들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만들고 트럼프 정권 내내 긴밀히 소통하는 채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 ▲ 공수처 "검찰 압수수색으로 영장의혹 해소... 수사기록은 검찰에" /사진 뉴시스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안에 "옳은 결정"

- ▲ 민주 제주도당 "탄핵정국 JDC 이사장 임명은 알박기 인사"
- ▲ 김두관 "이재명 대표, 개헌 논의 적극 참여해야"

- ▲ 진성준 "윤석열도 추진한 상법 개정 국힘이 반대...尹 무시하냐"
- ▲ 경찰 "尹탄핵심판 선고일, 필요하면 삼단봉·캡사이신 사용"